

2021-2

Democracy Academic Fellows
Report on Democracy Overseas

호주 의무투표제가 주는 시사점

Yeon Leslie

Victoria University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호주 의무투표제가 주는 시사점

Yeon Leslie
Victori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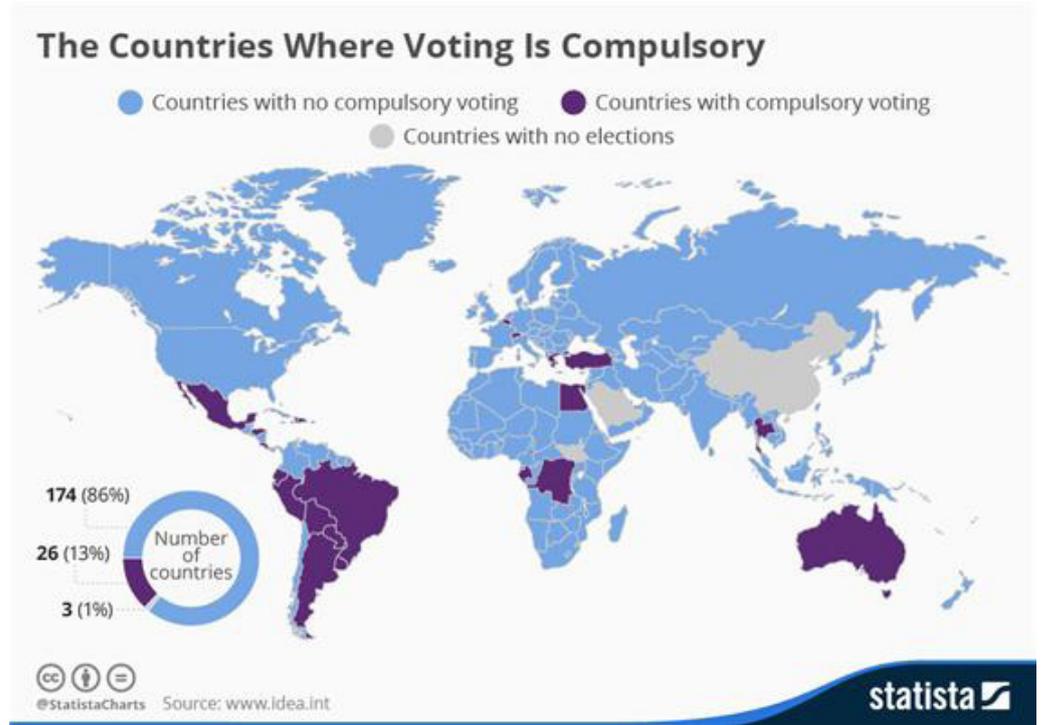
01

서론

2006년 9월 6일, 한국에서는 임시 공휴일이었던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한 후로, 새로운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민주화 이후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갑윤, 2008, P. 19) 선거일에 투표소가 아니라 여행지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표 독려를 위해 일반 유권자는 물론 유명 연예인들까지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공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 독려 행동이 야당을 지원하는 일종의 정파적 행위라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지병근, 2012, P. 127). 이는 투표율에 따라 울고 웃는 정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투표율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18대 총선에서는 46.1%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1대 총선에서는 66.2%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최근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화 직후 13대 총선 투표율(75.8%)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율 감소를 두고 자율적인 선거문화 정착으로 인해, 권위주의 시절 동원 선거로 기형적으로 부풀려진 거품이 빠지는 현상으로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김옥, 2009, p. 175). 우리는 간혹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기권자에게 강제를 부과하는 의무투표제를 떠올리기도 한다. 이갑윤 교수는 그의 연구보고서에서 투표율 제고 방안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당성을 꼽고 있으며, 바로 이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의무투표제가 확대되고 있지 않다고 논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도입이 결정적인 한계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고된다(이갑윤, 2008 P. 21). 의무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벨기에(1892년)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1914년에 이어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했으며, 201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6개국에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1]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



〈출처: 스태티스타, www.idea.int〉

위 그림의 통계에서 보듯이, 86%에 해당하는 174개국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13%에 해당하는 26개국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3개국 1%의 국가가 투표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나 네덜란드와 같이 한때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국가들도 있다(이갑윤, 2008, P. 22). 네덜란드는 1970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 투표율이 약 20%포인트 하락했으며 (Kamath N, 2016, P. 26), 베네수엘라는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후로 투표율이 30%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이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의무투표제가 투표율 제고 면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의무투표제의 실태와 장단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02

호주 의무투표제의 역사

호주의 의무투표제는 1924년에 도입되었으며 기권 시 호주 달러로 당시 20불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퀸즈랜드주에서 1914년 맨 처음 시도하고 1924년 연방 선거에서 투표율 제고를 목표로 도입한 후, 1941년 남호주주에서 마지막으로 도입함에 따라 호주 전 지역에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게 된다(Fowler A., 2013, P. 162). 호주에 의무투표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이후 1922년에 실시한 선거에서 이전에 70%를 상회하던 투표율이 60% 미만으로 하락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각 정당이 도입을 동의한 것이다(O'Regan S., 2019).

〈표 1〉 호주 연방 선거 투표율: 1914-1922

(단위:%)

	1914	1917	1919	1922
뉴 사우스 웨일즈	66.1	71.2	67.0	58.0
빅토리아	80.4	84.2	76.5	57.3
퀸즈랜드	76.4	89.0	84.9	82.7
남호주	79.9	72.2	66.4	53.2
서호주	71.6	78.2	63.1	50.0
타즈마니아	77.4	76.2	58.7	45.6
호주연방	73.5	78.3	71.6	59.4
퀸즈랜드 비교투표율*	+2.9	+10.7	+13.3	+23.3

*퀸즈랜드주 투표율을 다른 주와 호주연방 투표율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의 편차율

〈출처: Hughes and Graham: 1890-1964의 호주 정부와 정치 핸드북〉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어서, 〈표 1〉에서 보듯이 1914년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퀸즈랜드주에서 꾸준히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유권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휴일인 토요일로 지정하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였다(김정곤, 2016, P. 97). 또한 기관이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도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원이나 교도소, 격오지 등에도

이동식 투표소 (Mobile voting)를 설치하였다(AEC, 2021).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우편투표가 가능하며, 남극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화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AEC, 2021). 시청각 장애 혹은 치매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안내서를 발행하며 투표소에서도 별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 투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AEC, 2021). 이처럼 투표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서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주권자로서 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 하나 불공평한 이유로 선거과정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Fowler A.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부유하고 좀 더 교육받은 시민들의 투표율이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하위 계층 시민들보다 높아 불균등한 투표인 구성이 있었다고 보고한다(2013, P. 164). 의무투표제 도입 이전 평균 58.7%를 기록하던 투표율이 1924년 이후 극적으로 높아지며 평균 91.4%를 기록하게 되며 (Kamath N., 2015, P. 23) 의무투표제 도입 이후 훨씬 더 보편화한 투표인구비율을 나타내게 된다.

〈표 2〉 의무투표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투표율 비교

	도입 이전 투표율(%)	도입 이후 투표율(%)	투표율 상승(%)
뉴 사우스 웨일즈	82.5(1927)	94.9(1930)	12.4
빅토리아	59.2(1924)	91.8(1927)	32.6
퀸스랜드	75.5(1912)	88.1(1915)	12.6
남호주*	50.7(1941)	88.5(1944)	37.8
서호주	70.1(1936)	91.6(1939)	21.5
타즈마니아	81.9(1928)	95.0(1931)	13.1

* 남호주 주는 하원투표만 해당

〈출처 Hughes and Graham: 1890-1964의 호주 정부와 정치 핸드북〉

이렇게 높아진 투표율은 의무투표제 시행 초기에 좀 더 진보적인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노동당의 승리를 이끌어냈다(Fowler A., 2013, P. 168).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당시 호주 정치는 여러 개의 정당이 국회 의석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었지만, 몇 개의 보수 정당이 노동당에 대해 연합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연합정당과 노동당의 양당체제 환경으로 볼 수 있다(Fowler A., 2013, P. 169). Fowler A.는 의무투표제에 따른 선거 결과가 당시 정책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2013, P. 173). 노동당은 구조적으로 다른 정당들과는 확연히 차별된 정책을 표방했고, 이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다른 주요 정당의 정책들도 진보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보고한다(Fowler, 2013, P. 174).

03

의무투표제의 장단점

세상 어디에도 민주주의를 위한 완벽한 제도가 없듯이, 의무투표제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학력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나는 언제나 노동당이었어, 이번에도 노동당을 찍겠어.” 혹은 “나는 이번에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자유당을 찍도록 하겠어, 우리 도시는 도로사정이 더 나아져야 하기 때문이지.” 강제로라도 투표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당정책에 관한 홍보를 눈여겨보고 정치에 관심을 높여가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기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서 차별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본인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마땅히 찍어줄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의무투표제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뉴 사우스 웨일즈주의 주립 도서관 웹사이트에 소개된 의무투표제 지지와 반대에 관한 게시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쟁은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다.

카테고리	의무투표제 지지자의 논점	의무투표제 반대자의 논점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투표는 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시민이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의무사항이다.	시민은 자신이 투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의무조항은 전체주의에 가깝다.
적법한 대표성	의무적 등록과 투표는 선출된 대표인들의 정당성을 높여준다. 의석에서 승리한 후보자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득표한 것이다. 투표율이 낮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투표 가능한 대부분의 사람의 뜻에 맞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도 있다.	의무적 등록과 투표는 오히려 선출된 대표들의 정당성을 감소한다. 투표에 흥미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 투표자들이 강제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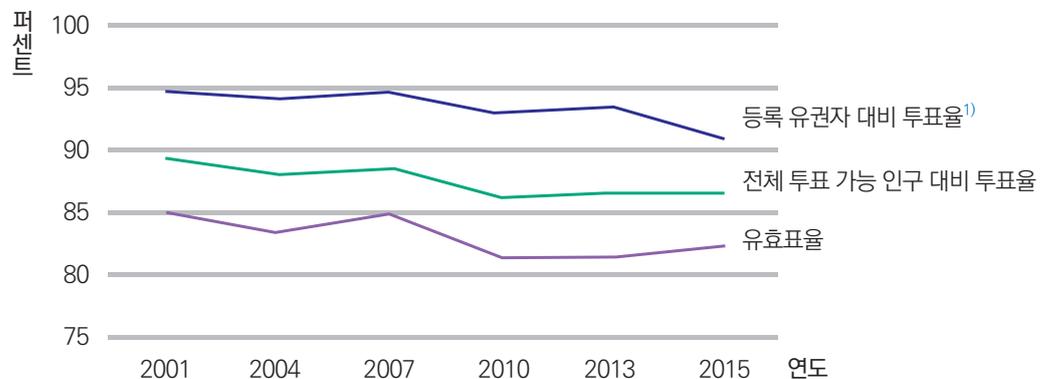
정치 교육	의무투표제는 시민들의 정치교육을 향상시킨다. 시민들은 그들이 투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진다.	호주 시민들이 투표가 자율적인 나라들의 시민들보다 정치적으로 교육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선택권	의무투표제하에서도 무효표를 만드는 방법으로 시민들은 여전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	의무투표제는 선출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도 강제로 투표하게 한다.
편향	자율적인 투표제 하에서는 가난하고 덜 교육받은 시민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정책이 잘 살고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편향될 수 있다.	미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는 의원이 가난하고 덜 교육받은 사람들의 대대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처럼, 자율적인 투표제가 반드시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편향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없다.
응답성	의무투표제는 호주의 정치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응답하게 한다. 새로운 정당이나 알려지지 않은 후보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한다.	의무투표제는 호주 정치시스템의 응답성을 떨어뜨린다. 자율투표제라면 정치 구조의 지각이 많이 변할 것이며, 정당과 후보자들은 시민들을 정책으로 설득해야만 할 것이다.

04

의무투표제와 무효표

호주의 2004년 선거 이후로, 당시 수상이었던 John Howard가 차기 선거까지는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몇몇 자유당원이 의무투표제를 자발적 투표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듯이 의무투표제는 호주에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다(Bennet S., 2005, P. 1). 이렇듯 때때로 의무투표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실제로 의무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식적 시도를 한 주는 남호주 한 곳이다(Bennet S., 2005, P. 5). 남호주에서 1994년에 자유당 정부가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노동당과 민주당에 의해서 저지된 것이다(김정곤, 2016, P. 97). 어찌됐거나 분명한 것은 호주에서는 의무투표제가 투표율을 90% 이상을 상회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2001-2015년 호주 하원의원 선거 투표율과 유효표율



〈출처: 유권자 투표율, 2016 상하원 선거, Australia Electoral Commission〉

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총투표율 및 유효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눈 여겨 볼 것은 무효표율 역시 10%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자유당의 상원의원 Minchin 의원과 같이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천 명의 호주 시민이 원하지 않는 투표에 강제적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주장하나, 호주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 Electoral Commission,

1) 호주에서는 유권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투표 가능 인구 중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가 존재하게 된다.

이하 AEC)에서는 의무투표제와 의도적 무효표 사이에 관계성이 불명확하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의무투표제에 반대한 의도적 무효도 있지만, AEC는 일반적으로 비의도적인 무효표들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2018, P. 45). 일례로 상하원 의원 투표 방법이 다르며, 주마다 다르고 연방선거와 주선거가 달라지는 복잡한 선거 구조와, 경우에 따라서는 15명이 넘어가는 많은 후보자 수로 인한 혼란에서 원인을 찾는다 (AEC, 2018, P.13). 더욱이 호주와 같은 다문화 국가에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호주의 복잡한 투표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무효표도 적지 않을 것이라 분석한다(AEC, 2018, P.13). 이는 아래 무효표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표 4〉 무효표 방식 - 2016년 하원의원 선거

방식	총		무효표율 %
	무효표 수	%	
빈칸으로 남겨두기	179,243	24.9	1.26
불완전한(Incomplete) 숫자기입	183,183	25.4	1.28
- 숫자 1만 기입하기	105,093	14.6	0.74
- 기타 불완전한 숫자기입	78,090	10.8	0.55
X자 등의 표시하기	55,121	7.6	0.39
다른 기호 표시하기	11,136	1.5	0.08
순차가 없는 기록	111,015	15.4	0.78
낙서, 슬로건 또는 기타 저항적 문구 기입	142,933	19.8	1.00
적합하지 않은 숫자기입	19,735	2.7	0.14
투표자 기명	117	0.0	0.00
기타	18,432	2.6	0.13
총계	720,915	100.0	5.05

〈출처: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2018a〉

호주의 투표는, 가장 선호하는 한 후보자를 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가한 모든 후보를 순위를 매겨 차례대로 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이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이런 복잡한 방식 때문에 잘못 기입한 숫자로 인한 무효표율이 전체 무효표율 대비 25%가 넘어가며, 의도적인 무효표라 명백히 볼 수 있는 낙서, 슬로건 또는 기타 저항적 문구 기입은 전체 대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높은 무효표율은 의무투표제 반대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05

의무투표제는 특정 정당에 이익이나 해가 되는가?

미국 선거는 날씨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울고 웃는다는 속설이 있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낮아져 보수당인 공화당에 유리하고, 날씨가 좋으면 투표율이 높아져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말이다(뉴시스, 2020). 또한 영국에서도 노동당의 주 지지층인 젊은 노동자들은 투표에 더 소극적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당에 유리하다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Kirkland C., 2019). 이처럼 투표율이 높아지면, 보수정당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념이다. 서호주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투표가 강제되지 않았을 때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인구 구성은 대체로 보수화한 특권층인 호주나 영국 출생으로서 전문직 종사자이며 정부단체에 고용되어 있고, 65세 이상이며 부촌에 장기적으로 거주한 자로서 고학력해 고수익자들로 밝혀졌다(Bennet S., 2005, P. 20). 또한 Lijphart에 의한 국제조사에서 투표율이 낮고 투표인 구성이 불균등한 선거의 대다수 투표자가 특권층 사람으로서, 높은 투표율이 보수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Bennet S., 2005, P. 21).

호주에서도, 의무투표제가 폐지되고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보수당인 자유당이 유리해지고 노동당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의무투표제가 시행 초기에는 확실히 노동당이 유력정당으로 성장하는 데 큰 구실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2001년 보수당인 자유당 당수 John Howard는 Howard의 전사들이라 일컬어지는 의외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지지자를 등에 업고 총리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보수당은 특권층에 의해서만 지지를 받는다거나,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당에 불리하다는 통상적인 관념을 무너뜨렸다(Bennet S., 2005, P.21). 실제로 19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4회의 하원의원 선거에서 보수당이 서른 번 승리했고, 상원은 1944-1949년을 제외하고는 노동당이 다수석을 장악한 적이 없다(Barber S. 외, 2014, P.4). 더구나 의무투표제가 시행된 이후인 1925년부터 매 3년마다 있었던 수상 선출에서 보수연합당이 22회 승리하는 동안 노동당은 그 절반인 11회밖에 정권을 잡지 못했다.

그렇다면 소수정당은 어떠한가? 해를 거듭해 의무투표제로 선거를 지속할수록, 시민들의 거대정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소수정당이나 독립정당은 선거를 통해 견고하고도 지속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임이 밝혀졌다 (Bennet S., 2005, P.21). 단적인 예로, 호주 열 번째 수상 Joe Lyons만이 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신생 정당 출신의 수상이다. 그것도 그가 기나긴 정치활동으로 지명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Australian Prime Ministers, 2021). 그러므로, 의무투표제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개인적 판단의 문제가 되었으며, 수년간의 선거를 통해 지켜본 바로는 어떠한 증거도 확실하게 무엇이 더 나은가, 어느 정당에 더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Bennet S., 2005, P.21). 또한, 국회 도서관 의무투표제에 관한 자료에서, 의무투표제 폐지가 어떠한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호주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의무투표제를 폐지하는 데에는 호주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많은 호주 시민이 의무투표제를 지지하고 있다.

〈표 5〉 의무투표제 지지율

조사연도	조사기관	의무투표제 지지 (%)	의무투표제 반대 (%)
1943	Gallup	60	35
1969	Gallup	69	29
1974	Morgan	60	36
1996	Herald McNair	72	25
2004	Australian Election Study 2004	74	26
2005	Morgan	71	28
2005	Ipsos-Mackay	74	24

〈출처: Australian Gallup Polls, October 1943; Bulletin, 12 September 1995; Sydney Morning Herald, 9,11 November 1996; Australian Election Study 2004; <http://www.roymorgan.com/news/polls/2005/3901>; Joint Standing Committee on Electoral Matters 2004, op. cit., p. 197.〉

위와 같이 의무투표제 지지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이는 유권자들이 의무투표제를 복종해야 할 법으로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법과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을 합리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 이해된다(Bennet S., 2005, P.21).

06

결론

지금까지 호주의 의무투표제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도 낮은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투표제 도입에 관해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동안 이를 시행해온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호주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급락한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20여 개국 중 벌금을 부과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90%를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의무투표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찬성만큼 반대에 대한 논점도 의미가 있다. 혹자는 높은 무효표율을 의무투표제에 대한 반대이사로 내세우기도 하나, 의미 있는 연결고리는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무효표는 오히려 복잡한 선거제도, 많은 수의 후보, 그리고 많은 이민자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무투표제와 높은 투표율이 특정 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또한, 투표는 의무이나 강제가 없는 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투표율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고된다.

〈표 6〉 제재수준에 따른 평균 투표율 비교

제재수준	포함된 국가 수	평균 투표율(%)
자발적 투표 국가	142	69.2
선언적 의무투표제 국가	7	63.9
연성 의무투표제 국가	10	76.9
강성 의무투표제 국가	7	91.3

〈출처: http://www.idea.int/vt/compulsory_voting.cfm, 김정곤 (2016)〉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호주처럼 제제가 따르는 강성 의무투표제 국가의 투표율은 90%를 상회하나, 선언적으로만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자발적 투표국가 보다도 오히려 5% 가량 투표율이 낮게 기록되고 있다(김정곤, 2016, P. 91). 그러므로, 의무투표제가 만병통치약으로 고려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고려하더라도 한국적 문화와 정서, 정치 풍토에 맞는 방법 역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권, 2011, 세대별 투표참여율로 결정되는 한국 선거 - 2000년대 주요 선거 세대별 투표율 통계 해석,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김욱, 2009,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현대정치연구, 2009년 봄호 (제2권 제1호) pp 175 - 196
- 김정곤, 2016,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의무투표제에 관한 사례 연구: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그리스, 연구방법논총 | 창간호(제1권 제1호), [DOI] <http://dx.doi.org/10.21487/jrm.2016.05.1.1.85>
- 뉴스시스, 2020, 미 대선 당일 날씨 '맑음'...바이든에 유리?, nate 뉴스, 공감언론 뉴스시스, <https://news.nate.com/view/20201103n07538?mid=n1101>
- 이갑윤, 2008, '투표율저하 원인과 제고방안 분석'; 200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 연구기간: 2008. 5. ~ 2008.7.
- 정한울, 2017, [정밀분석] 세대정치로 본 2017 대선 최대 변수, 보수에 대한 분노 진보가 주는 매력: 정치.사회.북한.국제, 월간 중앙 201702호,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5108>
- 지병근, 2012, 투표율 상승이 민주통합당에게 이로우るか?: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정당편향,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3호
- AEC, 2018, Analysis of informal voting; 2016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s,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 AEC, 2021, Voting options, https://www.aec.gov.au/voting/ways_to_vote/
- Australian Prime Ministers, 2021, Joseph Lyons; United Australia 6 January 1932-7 April 1939, <https://primeministers.moadoph.gov.au/prime-ministers/joseph-lyons>
- Barber S. 외, 2014, Federal election results 1901-2014, RESEARCH PAPER SERIES, 2014-15, Information analysis advise, Parliamentary library
- Bennet S., 2005, Compulsory voting in Australian national elections, Parliament of Australia Department of Parliamentary Services, Research brief, Parliamentary Library; Information analysis and advice for the Parliament, 31 October 2005, no. 6, 2005-06, ISSN 1832-2883
- Fowler A., 2013, Electoral and Policy Consequences of Voter Turnout: Evidence from Compulsory Voting in Australia,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13, 8: 159-182
- Kamath N., 2016, "I Voted": Examining the Impact of Compulsory Voting on Voter Turnout, CMC Senior Theses. Paper 1286. http://scholarship.claremont.edu/cmc_theses/1286
- Kirkland C., 2019, How important is turnout in a UK election? The recent actions of the parties give you a good idea: Politics and Society, The Conversation, December 2019 <https://theconversation.com/how-important-is-turnout-in-a-uk-election-the-recent-actions-of-the-parties-give-you-a-good-idea-128522>
- Louth J., 2005, Compulsory voting in Australia: Turnout with and without it, Australian review of public affairs, Volume 6 Number 1, pp. 25-37

호주 의무투표제가 주는 시사점

Democracy Academic Fellows: Report on Democracy Overseas

발행일 2021년 7월 3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